

## News

### 은성수·윤석현 "가계부채로 소비위축 우려...장기적으로 DSR 강화해야"

데일리안

은성수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문제 심각성으로 인해 DSR을 더 넓히는 방향 검토 중이라고 밝히며 3월 초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정책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가계부채가 쌓이는 것이 가득이나 위축된 소비를 더 위축시킬까 걱정이라며 "장기적인 방향에서 DSR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주장

### 금융권 대출 만기 재연장에 은행들 "서둘러 NPL 팔자"

파이낸셜뉴스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로 부실 규모가 불어날 것이라 판단해 1·4분기 은행들이 내놓은 NPL 규모가 전년 대비 37% 이상 급증 1·4분기 은행권 NPL 매각은 채권원금인 미상환원금잔액(OPB) 기준 6332억원 규모. 전년 같은 분기 약 4600억원 대비 약 1732억원 늘어

### 은성수 "은행 배당, 6개월 후 자본건전성 보고 정상화 결정"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에 대한 배당 자제와 관련, 6개월 후 은행의 자본건전성을 보고 정상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혀 은 위원장은 "현재 상태가 계속되면 6개월 후 자본적정성을 보고 결정하면 된다"며 "자본건전성이 나빠지면 한 번 더 살펴보고 결정, 회복이 되면 정상화 기대

### 사실상 펀드 팔지 말라는 소리...판매 뚝, 수수료이익도 뚝

머니투데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 판매에 대한 고강도 점검을 재차 예고하면서 위축된 은행권 사모펀드 시장이 더욱 쪼그라들 전망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은행권 사모펀드 판매잔액은 지난 1년간 25.21% 줄었다. 지난해 1월 24조6415억원에서 6월 21.9조, 12월 18.4조로 뚝 떨어졌다.

### 조용일 현대해상 대표, 자사주 4280주 매입 "주가 부양 의지"

한국경제

"조 대표가 주가 부양과 책임경영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위해 9,000만원 상당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해상은 지난 10일 주가 안정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사주 100만 주(취득예정금액 207억원)를 오는 5월 10일까지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은성수 "개인투자자 대주거래 상환기간 연장·증거금을 인하 검토"

아이뉴스24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차별 해소를 위해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며 상환기간을 3개월~6개월 늘리거나 1회성 연장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주식을 1천만원 빌리는데 개인은 증거금으로 40%인 400만원을 내고, 기관은 5%만 내는 것은 차별"이라고 발표

### 장사 망하니 갈 곳은 보험사뿐?...작년 설계사 2만명 늘어

아시아경제

보험업계에 연초부터 보험설계사 '모시기 경쟁'이 뜨겁다. 지난해 생명보험협회에 등록된 설계사수는 1월 기준 10만9436명에서 11월에는 11만2397명으로, 10개월 동안 3000여명이나 늘어

### 생보사 보유 현금 10조 붕괴... '현금 보다는 투자?'

데일리안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24개 생보사들이 보유한 현금 및 예치금은 지난해 11월 말 총 9조2683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4.7%(7조4771억원) 줄어 이처럼 생보사들이 현금성 자산을 줄이고 나선 배경으로는 우선 수익성 개선이 꼽힌다. 현금에 높은 안정성에도 운용 수익률이 낮다.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